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권 용 우**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Yongwoo Kwon**

요약 :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三分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기능?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주요어 : 수도권, 신행정수도, 삼분정책, 절충형 이전, 균형발전

Abstract : The essential polic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relocation of national pivotal functions into the non-Capital Region. The decentralization of pivotal functions should be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ov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tself and the regional function and specialization. Primarily, after selecting target institutions from the administrations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affiliated organizations, government-funded agencies, and institutions invested by governments, we need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diminish the problems and obstacles resulted from the relocation of public sect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s one of the alternatives which solve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improve the regional inequality. It is very much important that the Korean citizens agre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Key Words : Seoul Metropolitan Region,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relocation type, decentralization, regional equality

수도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국회를 이전해야 한다는 신행정수도 건설론을 천명했다. 바야흐로 수도권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중대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도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新행정수도 건설의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수도권 문제의 인식

수도권 문제의 인식은 수도권 집중화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변화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수

* 본 연구는 2003년 2월 11일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주제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ykwon@cc.sungshin.ac.kr

도권 신도시 및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전국인구 중 수도권인구가 점유하는 비중은 분권형 국가는 15~5%, 집권형 국가는 12~35% 수준이다. 런던권은 21.6%, 파리권은 18.2%이고, 국토의 9.8%를 점하는 광역 동경권은 32.3%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로 46.7%의 인구점유율을 보이는 超집중현상을 나타낸다.

지난 40여년 동안 수도권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2000년 전국 제조업체의 56.6%, 예금액의 67.9%, 대출액의 62.2%, 대학수의 41.8%, 대학생수의 39.8%, 의료시설수의 47.5%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입지해 있다.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직 취업자의 56%, 제조업체의 57%, 예금액의 51%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2000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총량경제력은 52.6% 대 47.4%로 수도권 집중이 탁월하다. 수도권의 조세수입은 전체의 70.9%를 나타내며 금융거래는 66.8%를 점유하여 대부분의 돈의 흐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총량경제력을 1로 잡았을 때 수도권은 전국보다 많은 1.14를 기록하는데 반해 비수도권은 0.88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대기오염은 선진국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하며,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이른다. 서울지역은 선진국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나 된다. 수도권은 전국 자동차의 42%,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되어 대기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9.6조원에 이른다. 이는 油類낭비, 시간지체, 채고누적, 상품훼손, 포장·하역·관리비용 등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차량 운행속도는 1980년에 30.8km/h이었으나 1998년에는 12.9km/h로 하락했다.

2) 수도권 지역정책의 평가

1960년 이후의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하향식 개발과 불균형 성장의 논리 아래 농어촌을 도시로 만들고 기존의 도시를 거대화하여 대도시권으로 전환시키는 도시개발의 지역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국토개발정책은 곧바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 국토개발정책과 수도권정책이 거의 병행적·상관적 관계 아래 전개된다. 1960년 이후의 수도권정책은 대체로 다음의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1) 억제정책시기(1960~1970년)

이 시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인구억제정책에 의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과 위성도시 구상(1965), 국토계획 기본구상과 대도시 방위지향정책(1968), 대도시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1969), 수도권인구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성남단지개발, 영동잠실지구개발, 대덕학원연구도시건설 등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기간 중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에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조성되어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지적인 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2) 분산정책시기(1971~1976년)

이 시기에는 국토공간의 재편성과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전국적 차원의 인구분산화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제시된 정책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과 수도권 위성도시 배치정책(197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1971), 국토이용관리법(1972),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2~73), 서울시 인구분산계획(1975) 등이다. 이 시기에 동남임해공업벨트가 조성되어 인구의 남하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 제한함으로써 국토의 산발적인 개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과천 신도시 건설(1978~83), 수도권 신공업도시인 반월 신도시 건설(1977~87), 공업단지 배후도시인 여천 신도시 건설(1977~86)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영남과 호남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부족했으며,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더구나 집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서 대도시 주변으로까지 인구나 산업활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3) 수용정책시기(1977~1990년 전후)

이 시기에는 인구의 흐름을 수용하자는 대도시 긍정론 내지 대도시 수용론이 지역정책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제안된 정책은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1977), 공업배치법 제정(1977), 5대 거점도시권정책 및 임시행정수도 구상(1978),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과 성장거점도시 및 생활권 계획정책(1981), 수도권내 공공철도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1982), 수도권 정비계획(1982) 등이다. 수도권은 이전촉진 권역, 제한정비 권역, 개발유도 권역, 자연보전 권역, 개발유보 권역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리체계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대도시권으로 변모되어 국토공간체계를 주도하는 가공할 만한 '공룡'으로 변모한 데 반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비대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어 전국은 대도시지역과 비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로 재편되었다.

(4) 확대개발시기(1990년 전후~현재)

1990년 전후이래 수도권에는 분당(성남시)·일산(고양시)·중동(부천시)·평촌(안양시)·산본(군포시) 등의 5개 주택신도시가 건설되었다. 분당신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역정책은 수용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확대정책으로 정책의 흐름이 변환되었다. 이 시기에 제시된 정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1993),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5),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1996) 등이다. 이 시기에 WTO체제를 빌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수도권에는 서울 면적의 1.2배에 해당되는 준농림지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준농림지와 수도권 상수원 보전권역에는 음식점, 러브호텔, 위락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의 주택건설과 허가를 받지 않은 공업시설들이 대거 입지하는 난개발 현상으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5) 평가

1960년 이후의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정책은 공

업성장에 의한 국가의 총량적 경제력은 고양시켰을 지는 몰라도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나아가서 대도시와 비대도시지역을 형성되면서 대도시지역에서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3)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내용 중 수도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①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기관 및 권한의 지방분산 및 이양 확대한다 ②기업·공장 및 금융기관 본사 등 민간 중추기관의 지방이전 지원한다 ③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를 위해 수도권에 과밀집중된 기능의 권역내 적정분산 도모 및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분업적 분산화 추진한다 ④수도권 과밀과 집중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공공투자 및 정부재정지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지양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수도권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한다 등이다.

서울은 새천년의 세계도시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도시로서 국제적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천년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래도시를 구현하며,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본목표를 세웠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수도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계획의 상당 부분은 2000년대에 제시되는 각종 수도권 문제 해결 대안에서 활용되고 있다.

4) 신도시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론

(1) 신도시 건설론

2003년에 들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2~3곳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있다. 신도시 건설이 과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을 이루려는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난개발을 수반했기 때문이

다. 서울의 강남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해 서울 인구가 분당 등 서울주변 5개 주택신도시로 집중됐다. 인구가 나간 서울 주거지는 서울 이외지역 유입인구가 배웠다. 이러한 주택순환과정은 수도권 전역에 여지없이 적용되었다. 사람들이 나가 버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주택으로 수도권 이외지역 인구가 흘러들어 왔다. 신도시의 잦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구유입이 가중됐다. 신도시 주변은 난개발로 뒤범벅된 포도송이 기생개발이 자행되어 막개발 지역이 있는 기형도시권을 이뤘다.

(2)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동북아지역에서 물류, 비즈니스 등 주요 경제분야의 중심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서울은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송도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를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물류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없으며 지역균형화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지역균형화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권역별규제 등을 완화하는 수도권규제완화책과, 인천과 경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계획 등 수도권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대책의 종합적 검토 없이 선행되어 추진된다면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핵심전략은 특정 지역의 인위적 개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어 있듯이 첨단기술 집적단지 구축의 핵심은 물리적 단지조성이 아닌 복합적 네트워크 창출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동북아 경제중심은 인위적 개발보다는 지역의 핵심역량이 자연스럽게 결집되어 차별화된 집적단지들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순리다.

2. 수도권 문제의 해결책

이상에서 논의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른바 三分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分權과, 돈·기능·사람을 옮기는 分散,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分業이 그것이다. 3분정책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등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고찰해 보고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중추기능의 이전

(1) 중추기능 이전 의무화

중추기능은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의미한다. 중추행정기능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부속기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뜻한다.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은 국가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정책의 인센티브 제공

중앙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등의 지방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자체가 민간기업 유치 시 국고 보조금 지급, 지방채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면제, 종업원을 위한 주택건설 자금의 저리융자, 종업원의 감근세 감면,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청와대와 장관은 함께 이전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집행비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는 수도권에 있거나 충청권에 이전하거나 간에 함께 모여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4) 중추행정기능의 산하기관 이전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은 굳이 각 행정부처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은 지역특성에 맞춰 분산 배치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산하기관이 이전할 때 관련업체를 함께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600여 개 산하기관에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가족수를 평균 4인으로 추산하게 되면 비수도권으로 산하기관이 이전할 경우 1백만 명 이상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1) 지방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지역분권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균형발전법', 그리고 지방대학을 육성 지원하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 등 지역분권화 관련 3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분권화 관련법에서는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 지방대 출신 고용촉진기금의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稅源의 지방 이양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단체에게 균등화 보조금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 지방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 人材의 지방할당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교육을 특성화하고, 지방 인재 등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투입비율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센터로서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지역별·영역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며,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4)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균형선도도시(pilot city, package city)란 국토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지방 거점도시를 일컫는다. 산업, 교육, 문화, 거주, 상업기능 등 보통시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기능들이 함께 갖추어진 균형선도도시를 만들어 그곳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균형선도도시의 공공부문에서 물리적 기반시설 등의 공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官 협력 조성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균형선도도시의 개발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범적으로 몇 군데의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남권(예로 부산, 대구), 호남권(예로 광주, 전주), 충청권(예로 대전, 청주), 강원권(예로 강릉, 원주)의 기존 거점도시에 特區 형태의 지구를 만들어 산업, 교육,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선도적인 균형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산업, 교육, 공공기관의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어 균형선도도시를 육성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다. 균형선도도시 건설지역의 고교평준화를 해제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1)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지역으로 변환

수도권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들, 예를 들어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수도권의 탈공업화

수도권은 탈공업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탈공업화 현상은 경기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은 1984~1998년 동안 828만 m² 공장부지가 감소했다. 수도권에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생산자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경기도가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는 공업 교외화에 이어 생산자서비스 부문도 교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수도권의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환

수도권은 후기산업사회 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3차 산업 종사비율이 50%를 넘으면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수도권은 후기산업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은 제조업 고용감소 및 서비스 고용 증가로 표현된다. 경기도로의 제조업 분산은 서울의 낡은 도시시설, 비싼 지가, 교통혼잡, 물류비용상승 등의 집적 불경제와 경기도의 저렴한 지가, 편리한 교통 시설 등에 의한 장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4) 경기도 제조업의 비수도권 이전

경기도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영세기업 성장이 탁월하며 영세기업들은 노동집약형인 의류나 전자산업이 주류이다. 경기도에는 미등록 공장이 증가한다. 미등록공장은 공장설립규제와 환경시설 기준의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시설이 미비한 도금, 염색, 주물, 피혁 등 공해공장이 대부분이다. 미등록공장은 동두천시, 포천·양주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난개발과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미등록 공장은 수도권 전체 제조업체수의 20%에 달한다. 영세공장과 미등록공장은 대단위화해서 '계획입지' 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경기도의 제조업 기능은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경기도를 탈공업화지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4)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제시했다. 이러한 해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1)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화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①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등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 ②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③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한다 ④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2) 신행정수도 건설론 평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서는 긍정론과 신중론이 상존한다. 긍정론은 ①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

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획기적 대안이다 ②수도권의 교통·주택·교육·환경·물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③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울과 지방이 모두 잘 사는 상생의 전략이다 ④집중된 정치권력과 경제적 富, 문화적 혜택을 분산시킬 수 있다 ⑤분권·분산·분업 등 三分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신중론은 ①청와대, 중앙부처, 공기업이 가면 수도권 기능이 저하된다 ②주택가격 및 부동산 가격과 담보가치가 하락한다 ③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해서 고통 당할 것이다 ④신행정수도 건설에 재원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⑤수도이전은 통일 이후에 진행해야 바람직하다 ⑥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은 여전히 소외된다 ⑦이전기간 10년은 너무 짧은 점을 지적한다.

(3) 국민적 합의 필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전국민이 완전히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외국의 사례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설여부에서부터 입지·규모와 기능·재원 등 세부적인 쟁점에 이르는 제반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수렴된 의견은 국회동의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행정수도의 건설 방안¹⁾

1) 청와대에 「국토수석」신설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토수석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등에 관해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노무현 정부에 설치된 행정쇄신·지방분권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등의 4개 조직은 국토수석과 연계하여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2) 절충형 수도이전유형의 선택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일극집중형과 공공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 배치시키는 다극분산형,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형의 방안이 있다.

(1) 일극집중형

일극집중형은 One-shot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수도기능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천도(遷都) 이전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소재한 청와대, 행정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의 한 지역에 모두 옮기는 방식이다(그림 1).

일극집중형의 장점은 기관간의 업무연계가 편리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충격이 감소되며, 이전대상기관의 반발 및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효과가 또 다른 중심지의 형성에 따라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전 대상지역 내에서 새로운 집중의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기능을 수용해야하는 시설의 건립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등이 사례다. 브라질리아에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중앙부처가 이전했으며 철도청 등 일부부처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잔류했다. 캔버라에는 행정부, 의회, 최고재판소 등이 있다.

(2) 다극분산형

다극분산형은 공공기관의 속성과 각 지역의 특

성에 맞추어 전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다. 다극분산형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행정의 연계성이 취약해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전지역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양양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기관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유치경쟁을 유발하는 단점도 있다(그림 2).

다극분산형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앙행정부처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수도권의 과밀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완전한 다극분산형은 아니나 두 개의 도시에 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독일의 본과 베를린의 사례가 있다. 베를린에는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교통건설주택부, 복지부, 외무부, 홍보처, 총리실 등 10개 부처가 있다. 본에는 국방부, 교육연구부, 소비자보호 및 농림부, 보건부, 환경자연보호및원자력안전부, 경제협력부 등 6개 부처가 있다. 연방정부의 이전구상에 따르면 총리실과 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하며,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잔류하고 베를린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다.

(3) 절충형

절충형은 집단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한 지역에 집중시키고 비교적 독립성이 강하거나 특정지역과의 연계가 높은 기관은 개별적으로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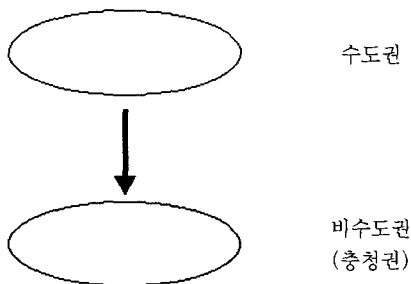


그림 1. 일극집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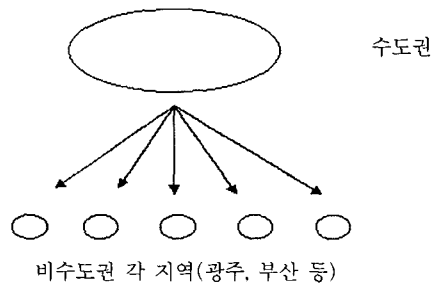


그림 2. 다극분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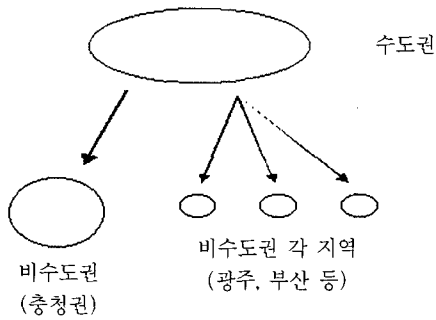


그림 3. 절충형

시키는 접근이다. 절충형 이전방식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육성의 효과가 있다. 중앙행정업무의 연계성 정도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나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중추행정기능 중 집단입지가 필요한 산하기관을 충청권에 집중시키고 지역특성과 연계가 높은 산하기관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다(그림 3).

정확한 절충형은 아니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1960년대 이후 런던의 과밀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신설 부속기관을 런던 대도시권밖에 입지시켰다. 실업률이 높은 낙후지역에는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을 이전했다. 영국은 지속적인 분산정책을 진행하여 1988년까지 40,900명을 런던 이외지역에 이전했다. 프랑스는 1950년대 이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입지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해주고 파리권에는 엄격한 입지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모든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해 78개 도시에 170여 개의 기관을 이전했다. 스웨덴은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명 이상의 16개 도시에 50여 개의 기관을 이전했다.

(4) 절충형 이전방식이 최상의 방법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은 대통령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의 집행부서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는 함께 모여있는 일극집중형 이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은 굳이 각 행

정부처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의 속성과 지역특성에 맞춰 분산 배치하는 다극분산형일 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최상의 형태는 일극집중형과 다극분산형의 장점을 살린 절충형이다. 절충형일 때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하기관의 기능 중 농업기능이 특화된 광주전남지역에 농림기관을, 대덕과 학단지가 있는 대전에 과학기술기관을, 아산에 건설교통기관을,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보건사회기관을, 해양기능이 특화된 부산에 해양수산기관을, 대구에 산업자원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

3) 신행정수도 세부 쟁점의 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을 조정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²⁾

(1) 이전 후보지 선정

입지요건은 서울로부터 1~2시간 소요되는 생활권으로서,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등이 있어 전국적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취득이나 물 공급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종 재해와 국가안보상 안전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개발잠재력이 있는 곳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전 후보지는 신도시 건설방식과 기존도시의 시가지 확장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충청권 일원을 이전대상지역으로 하되,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2) 이전 대상기관의 범위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국회를 이전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다. 국회와 행정부처는 정책 협조를 위해서 함께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회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방안

소요재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 등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청사매각 비용, 행정수도에 대한 민간부

권 용 유

문의 입주금 등의 채원 충당방법도 있다.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수도의 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 청사 건축, 현재의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 등에 따라 재정 수요의 내용이 달라진다.

(4)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

새로운 행정수도는 인구 50만 명에서 장기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건설하자는 의견이 있다. 새로운 행정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건설하고, 서울은 경제·물류·교육·문화중심지로서의 현행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장이 있다.

(5) 통일 이후의 新수도 문제

새로운 행정수도는 통일시대에도 수도기능을 수행하되 서울·평양과 함께 양극체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면서 분권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일을 상정할 경우 '행정수도를 현재보다 더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의문과 '분단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일 이후의 수도로는 서울, 평양, 충청권 신행정수도, 서울과 평야 사이에 건설하는 새로운 수도 등이 거론된다.

(6) 이전 기간

브라질은 1889년 제정 헌법에 신수도 건설을 명시한 후 1960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로 수도를 옮기는데 7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호주는 1900년 제정 헌법에 연방수도 조성을 규정한 후 1927년부터 캔버라에 이전을 시작했으며 1988년 국회의사당을 완공할 때까지 88년의 기간이 걸렸다. 일본은 15년째 수도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기간은 통상 몇 십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7) 단계적 이전

중추기능의 이전은 이전효과를 보아가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전 배치한다. 2단계에서는 집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중앙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을 이전한다. 1단계에서 옮기지 않은 중앙정부부처

의 산하기관 중 집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충청권의 한 지역에 이전한다. 3단계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를 이전한다. 중앙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이 집단적으로 이전되어 있는 충청권에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를 이전한다.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음에는 청와대와 非경제부처를 옮기고 다음으로 경제부처를 이전한다. 4단계에서는 협의를 거쳐 입법부를 이전한다.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가 함께 이전해 있는 충청권에 입법부를 이전한다.

4) 생태환경도시(eco-city)의 건설

신행정수도는 가장 앞서가는 생태환경도시이어야 한다. 태양열 주택,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廢熱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 청정연료 사용, CNG 버스, 중수도 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스템 구축 등 자원절약 및 자원순환형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요망된다. 신행정수도는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1인당 녹지면적이 40m²이상, 도시 전면적의 1/3이상의 녹지, 양질의 상수원, 인공지능형 교통체계, 오·폐수의 전량 고도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4. 맺음말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각종 환경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三分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기능·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三分정책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등이다. 중추기능의 이전은 중앙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이전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600여 개 산하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1백만 명 이상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稅源의 지방이양, 人材의 지방할당,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등

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지역기능은 변환되어야 한다.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相生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둘째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전후보지, 이전대상기관, 소요예산 및 재원, 新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 통일이후의 수도권 문제, 이전기간, 이전단계 등의 세부 쟁점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특히 신행정수도는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전면적의 1/3이상이 녹지이며,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생태환경도시(eco-city)이어야 한다.

셋째로 행정수도 이전유형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입법, 사법기관이 일정지역에 일극집중형으로 입지하고, 상당규모의 산하기관이 지역특성에 맞춰 각 지방에 다극분산형으로 입지하는 절충형이 최상의 방식이다. 그것은 일극집중형은 또 하나의 과밀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일극집중 되지 않은 나머지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극분산형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산하기관의 속성과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넷째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 설치된 행정쇄신·지방분권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등의 4개 조직은 국토수석과 연계하여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註

1) 각 학술단체와 정당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새천년 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2002.10.11) 정책토론회 논문집. ①성경룡, 분권·분산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②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하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3.1.27)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①원계무,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②윤영태,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 한가? ③권용우,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 모색 ④이경기·노근호,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⑤오덕성,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 대한지리학회(2003.2.11) 新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논문집. ①박삼욱,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개회사 ②안성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③김형국,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④권용우, 수도권문제와 신행정수도건설의 방안 ⑤김덕현, '신행정수도' 논의 입장과 그 필요성·가능성·현실성 ⑥신혜경, 행정수도건설 발제에 대한 토론요지 ⑦이건철, 중앙정부부처의 지방분산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⑧이규황, 행정수도건설 발제에 대한 논평 ⑨이재하,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대도시 분산 ⑩최막중,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4가지 유의점 ⑪최병두, 수도권 집중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치경제학/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2003.4.25) 신행정수도 건설 공개토론회 논문집. ①김원, 새 정부의 이념과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②강현수, 지방분권화시대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방향과 과제 ③안성호,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 ④권용우,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모형 ⑤박병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추진전략/한국지역학회 외(2003.4.25)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논문집 ①이재은,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간 관계의 재편방향 ②김의준, 지역격차분석과 정책과제 ③남기범,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2) 필자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부 쟁점에 관해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 ①조선일보 인터뷰(2002.12.11/2003.3.28) 시론 "기능분산과 균형발전" (2002.12.14) ②중앙일보 인터뷰(2002.10.1, 12.13, 12.24/2003. 1.27, 2.10, 2.12) ③동아일보 인터뷰(2003.1.28) ④한겨레 인터뷰(2003.1.20, 1.28, 2.10, 3.6, 4.24) 좌담 "경기 1천만 시대" (2003.3.17) 평론 "행정수도 이전형태" (2003.4.10) ⑤경향신문 인터뷰(2003.1.13) ⑥대한매일 시론 "대통령후보자 공약검증" (2002.12.10) 시론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2002.12.12) ⑦문화일보 인터뷰(2002.10.9) ⑧세계일보 시론 "지역분권화 관련법 제정을" (2003.2.4) ⑨대전일보 시론 "행정수도 이전 단계적으로" (2002.12.25) ⑩한국경제 인터뷰(2003.2.12) ⑪매일신문 인터뷰(2003.2.14) ⑫충청일보 인터뷰(2003.2.12) ⑬연합뉴스 인터뷰(2003.2.11) ⑭내외경제 시론 "삼분정책 동시에 실천해야" (2003.2.24) ⑮서울경제 시론 "수도권 과밀의 해법" (2003.3.6) / TV ①KBS TV 인터뷰(2002.12.29/2003.2.25) ②대전MBC TV 인터뷰(2003.2.11) ③진주MBC TV 인터뷰(2003.3.4) ④YTN 인터뷰(2002.12.19/2003.2.12) ⑤KTV 대담 "인수위 활동, 지역균형화 정책" (2003.2.21) ⑥매일경제 TV 인터뷰(2002.12.27) ⑦아리랑TV 대담 "신행정수도 건설" (2003.3.8) ⑧대전방송 TV 인터뷰(2003.5.14) / 라디오 ①

교통방송 인터뷰(2002.10.2/2003.3.28) 좌담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2003.1.1) ②광주CBS 인터뷰(2003.5.1) ③대구CBS 인터뷰(2003.5.1) / 잡지 ①“국가가 관 지방이전 의무화 필요하다”(월간경실련, 2002.3.31) ②“남서울 신도시 반대 4가지 이유”(서울경제 이코노믹 리뷰, 2002.9.24) ③“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Yonsei Annals, 2003.3) ④“수도이전 바람직 한가”(현정, 2003.3.30) ⑤“수도권 문제의 해결책(도시문제, 2003.4.1) ⑥“수도권 교통·환경, 광역관리를”(한겨레 Economy 21, 2003.4.29)

文 獻

국토연구원, 2001, Vision 2011 Project, 국토균형발전 반 세부과제.

권용우, 2001, 교외지역, 아카넷.

권용우, 2002,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권용우·황희연·이원호, 2003, “중앙부처 및 정부 투자기관 광주 유치방안,”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광주광역시.

김병준, 2001, “우리 나라에서의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대구사회연구소.

김창석·남 진, 1996, “수도권지역 기업본사의 입지 이전 경로와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형기, 2001,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대구사회연구소.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환경관련 정책 과제 토론자료.

박상우·원, 1992, 행정중추관리기능 분산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박양호·김현식·이문원·이원섭, 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국토연구원.

박양호·김창현, 200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박현주·김광익, 1997, 수도권 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새천년 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2002, 12, 노무현 후보 정책공약 자료집.

한나라당, 2002, 10, 이회창 후보 경실련 정책토론회 자료.

환경부, 2003, 新정부 元年 주요 업무보고.

황희연, 2002, 10. 3, “중앙부처 여러 곳에 분산을,” 동아일보 시론.

황희연, 2003,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공론의 장을 열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 신행정수도 공개토론회 개최사.

Campbell, Scott D., 2000, The Changing Role and Identity of Capital Cities in Global Era, <http://www-personal.umich.edu/~sdcamp/cc1.html>.

Kwon, Y., 2003, Regional inequality and its improvement in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37(1), 1-15.

Park, S. O., 1994,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major triggers and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